

전주매일



2018년 **8**월 **3**일 **금**요일 (음 6월 22일) 제21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선도

전북도,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전북대 · 김제시 등과 협력 결실

전북도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꿈꾸며, 선도사업으로 준비해 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농 식품부 공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문재 인 정부의 혁신성장 국정과제로 선정 되어,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과 기술혁신의 기능이 집약화된 첨단 농업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익 성(농가교역조건)은 악화되고 농가 고 령화는 심화됨과 동시에 청년인력의 유입은 미흡해 노동력 부족, 생산성 둔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농업에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 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이다.

농가당 좁은 경지면적(美: 175ha, 韓: 1.5ha), 높은 농지가격, 인력감소등의 제약을 가진 우리 농업에 경쟁력제고 및 양질의 지속가능한 청년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대안으로서 부상, 최적 생육환경 콘트롤을 통해 불필요한비료 농약 사용량 감소 등 투입재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환경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시스템으로 인정 받았다.

2018년 4월 농식품부에서 본 사업의 공모계획을 발표한 이후 송하진 도지 사는 전북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 성에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적극적으 로 설명하고 민선 7기 공약으로 내걸 며 사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3 대 핵심(필수)기능으로 청년보육센터 (실습농장), 스마트팜 실증단지, 임대 형 스마트팜 단지 등을 최대한 집적화 하고 농업과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대상지와 운영모델 개발에 대한 예비계획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3대 핵심 기능을 최대 집 적화할 수 있는 김제시 백구면 영상 리, 월봉리 일원에 전북도, 전북대학 교,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이 협력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에서 청년창업보육 시설운 영 및 교육을 추진하고 전북 농식품인 력개발원 앞에 연접한 전북대 소유부 지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스마트팜 실 증단지를 조성 운영한다.

앞으로 전북도는 농업인단체 및 농식품부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 및 기본계획을 연도 말까지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연차별 조성 운영계획에 따른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선정은 "전북도, 전북대학교, 김 제시, 농업인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도내 농생명 기관/업체 등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며, "협조해 주신 전북도민과 더불어 전북도의 가치를 인정해 준 중앙 평가위원 및 농식품부,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진성 기자

완주 '놀토피아' 전북투어패스로 즐겨요

구입한 소비자 가이드북 쿠폰 가져가면 평일 20% 할인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어린이 모험테마마을 '놀토피아'가 전북 투어패스 특별할인가맹점으로 가 입했다.

2일 완주군은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가이드북의 쿠 폰을 가져가면 평일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놀토 피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암벽등 반을 테마로 하는 모험 놀이시설 로 클라이밍을 비롯해 스크린 테 니스, 미니풋살장, 정글짐 등 다 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도내 14개 시 군의 관광시설, 숙박, 음식, 체험 등을 카드 한 장으로 무료 이용



및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 북을 관광하는 여행객들에게 편 의를 높여주는 관광 상품이다.

완주군은 대표적으로 삼례문화 예술촌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완주=이중복기자

전주시민 삶의 질 향상 스마트시티 구축 '맞손'

시, LX공사와 협약 체결 도시 정보 디지털 공간 구현 통합국토정보시스템 구축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국토정보 등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지 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손 을 잡았다.

시는 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 주시장과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의 지속발전가능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스마트시티 분야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체결한 최초의 협약으로 상호 정보 및 기술협 력, 전주시의 행정정보 활용 및 실험 사업 추진, 통합국토정보를 활용한 스 마트시티 서비스 등의 협력사항을 담 고 있다.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협약에 따라 일부 지역 실험사업을 통해 지하 및 지상의 공간정보와 센서 기반의 실 시간 상황인지 정보가 통합된 국토정



전주시는 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의 지속발전가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

보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게 된다.

이후, 시는 통합된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저성장과 기후변화와 재난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응해 시 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국 토정보공사는 이 실험사업을 통해 통 합국토정보서비스 신사업 모델을 도 출해 나갈 예정이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취임 직후, 전주시와 스마트 시티 분 야 공동목표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통합국토 정보를 활용한 전국 최고의 서비스 모 말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변화한다"며 "오늘 협약이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국 토정보공사와 전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3차원・실시간・시공간

을 모두 아우르는 정보를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구축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매일 INDEX

3면 - "올드보이 귀환, 정치는 후진"

기무사, 해체 수준 재편성

개혁 권고안 확정

현재 병력 30% 감축 60단위 부대 전면 폐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 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 하는 개혁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빙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으로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 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계획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 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 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

어 가도록 했다.

개혁TF는 그동안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의 명칭을 바꿔 가칭 국방보안 방첩본부 로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 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장영달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 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참 모 기관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 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 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 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

기무사 요원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 면 지금의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 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 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국빙부에 건 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 2면에 계속

